

여성대통령시대 열리는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이제 우리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와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합치면 5~6명의 여성후보들이 연말에 치러질 대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릴 것인가를 점치고 있다.

지난 제17대 총선은 당시 정계의 위기상황에서 여성들이 정당의 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대변인 등으로 전면에서 나서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국회역사상 최초로 두 자리 수인 13%, 39명의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였는가 하면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국정을 맡을 정도로 여성의 정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렇듯 여성의 정치참여의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했던 것은 거간에 성장한 여성의 정치력의 영향이 전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위기국면에서 그 돌파구로서의 대안이 여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계기이다.

2 그 동안에 사장되었던 여성의 잠재력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하였고 그 대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특유의 능력이 검증되면서 오늘의 우리사회가 여성대통령시대를 꿈꾸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여성에게는 기회였다.

왜 여성대통령인가? 남성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여성은 적어도 남성과 다르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의 승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쳐져 있는 80%가 겪는 고통도 함께 보살피는 모성적인 리더십을 여성이라는 인간군이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서일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성적 리더십이 생리적인 여성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부성이 강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모성적 리더십을 지닌 남성지도자들도 있다 이 시점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지도력은 분명 우선 민생을 살피고 배려하는 리더십이다.

유럽의 이상주의에 따르면 한나라가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풍요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국가가 풍요해져야 개개인이 잘산다고 설파하면서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는 일에 집착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승자독식의 폐단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80%의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회 각 부문의 극심한 양극화현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제앙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해결책의 향방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슬기롭게 문제를 헤쳐 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은 일단 지도자를 현명하게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국제적 추세를 보면 여성대통령을 비롯한 여성 최고정치지도자들이 급증하였고 또한 되려고 하는 여성의 수도 늘고 있다. 탈냉전으로 인한 환경,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생활 밀착적이고 여성친화적인 과제들의 부상이 한몫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고 있다. 진실을 수호하고 화해노력과 열린 대화를 통한 국민통합을 성취해낸 베로니카 미첼레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

령, 남성중심사회이며 전쟁과 폭력, 가난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치유의 모성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그 예가 된다.

우리나라 여성정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성인지적인 성향이 중시되며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및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요구되는데 남성들의 특성인 결단력과 추진력도 긴요하지만 21세기에 더 적합한 새로운 리더십에는 여성의 특성인 포용과 관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5개월이 지나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주어진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정의가 되살아나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